민주, 호남 지역구 유지·수도권 통폐합 추진

캐스팅 보트 호남 의원 달래기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 변경
관련 법률 정비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협상 타결을 위해 호남 등 농어촌 대신 수도권 지역구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법률 정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부칙'을 신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 여수 갑·을 선거구 통합 및 순천시의 분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호남 지역구 축소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수도권 지역구를 줄이는 타협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인구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의결정족수를 위해 필수적인 '호남계' 야당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지역구를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 경우, 현재 지역구(253석)에서 3석만 줄이면 된다.

나아가 호남 지역구 대신 수도권 지역구 통폐합을 통해 지역구 의석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노원·강남, 경기 군포·안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 같은 방안을 실행에 옮기려면 관계 법령 등 선거구 획정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의 1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인구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31일(5천182만6천287명)이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구 획정 기준일이다.아울러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 대 1을 넘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라야 한다.

이런 원칙 아래 지역구를 250석으로 설정하면 전남 여수시 갑과 전북 익산시갑 등은 통폐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인구 기준일을 변경하기 위한 부칙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변동 추이를 분석해 이들 지역에 유리한 시점을 기준일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에도 여야 협의 끝에 2015년 10월 31일을 인구기준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일관되게 끝까지 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갑석 의원(서구 갑)도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의원총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내년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호남 지역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전남의 이개호, 서삼석 의원 등과 함께 지도부와 적극 소통, 광주·전남지역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과 현안 처리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협상력 복원" 한목소리

유기준·강석호 출마선언
심재철·권성동·안상수 등 거론
패스트트랙 정국 돌파 첫 과제

나경원 원내대표로부터 제1야당의 원내 지휘봉을 넘겨받을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앞에는 '패스트트랙 정국 해법 마련'이라는 과제가 놓였다.

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폐회일이기도 한 10일 임기가 끝난다. 이때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야당과 '4+1' 협의를 가동,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채비를 갖추고 있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전략 마련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몸싸움까지 불사했지만 결국 선거제 개혁안 및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지 못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무더기 고소·고발됐다.

나아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가 임박했으나, 이를 막기 위한 뚜렷한 묘수를 내놓지 못했고, 여당과의 협상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최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따라서 어떤 패스트트랙 해법을 제시하느냐가 이번 원내대표 경선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한국당의 전략이 대대적으로 수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4일 현재 4선의 유기준 의원과 3선의 강석호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또한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의 심재철 의원은 출마 의사를 굳히고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 중이며, 3선의 권성동·안상수·윤상현 의원이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출마를 공식화한 유기준·강석호 의원은 무엇보다 '협상력 복원·정치력 발휘'를 제시했다.

강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으로,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며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협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당이 한국당을 배제·고립시키고 있는데, 다른 당과 협의·연합해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비당권파 신당명 '변화와 혁신'

"8일 발기인 대회 개최 예정"

바른미래당을 떠나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신당 명칭을 가칭 '변화와 혁신'으로 정했다.

변혁 신당기획단 공동단장인 유의동 의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부터 확정된 신당명(가칭)을 바탕으로 신당을 염원하는 발기인을 전국적으로 모집해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발기인 대회에서 변화와 혁신은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사용할 신당명을 대국민 공모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개혁적 중도보수 신당 실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힘찬 행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화와 혁신은 애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고 나서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를 전후해 바른미래당을 탈당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상황 변화로 탈당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종료 시점에서의 탈당은) 정상적으로 정기국회 안에 모든 문제가 일단락될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유승민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지금은 그때와 상황에 큰 차이가 있다"며 "(탈당 시점은) 한 번 더 숙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탈당 시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에서 그런 결정을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檢수사…민주 선대위 출범 연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과 여권을 겨눈 검찰의 수사 등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당초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10일부터 선대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데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의 '하명 수사'·'비위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수사망을 강하게 조여오면서 당 역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당초보다 늦어지리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검찰수사, 개각 시기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이 세 가지 요소와 선대위 구성이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안으로 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 선대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 권역을 대표할만한 상징성 있는 인물들을 내세운 '공동 선대위'를 구성하는 방안은 여전히 검토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

다만 총선기획단은 정례회의를 통해 청년·여성 등용을 위한 제도 정비를 하는 등 총선 채비를 하고 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검증위원회 역시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서 전날부터 예비후보자 1차 공모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문의장 "한반도 평화 정착, 한중 양국 국익에 부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한중 양국의 국익에 매우 부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정부시, 중국 민간 싱크탱크 차하얼 학회와 공동 개최한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순항하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잠시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이 고비를 넘기는데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 미국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중국이 가교 역할을 해준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이날 포럼의 주제인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한중간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을 언급하고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넘)의 마음으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박정 의원과 안병용 의정부 시장, 한팡밍(韓方明) 중국 차하얼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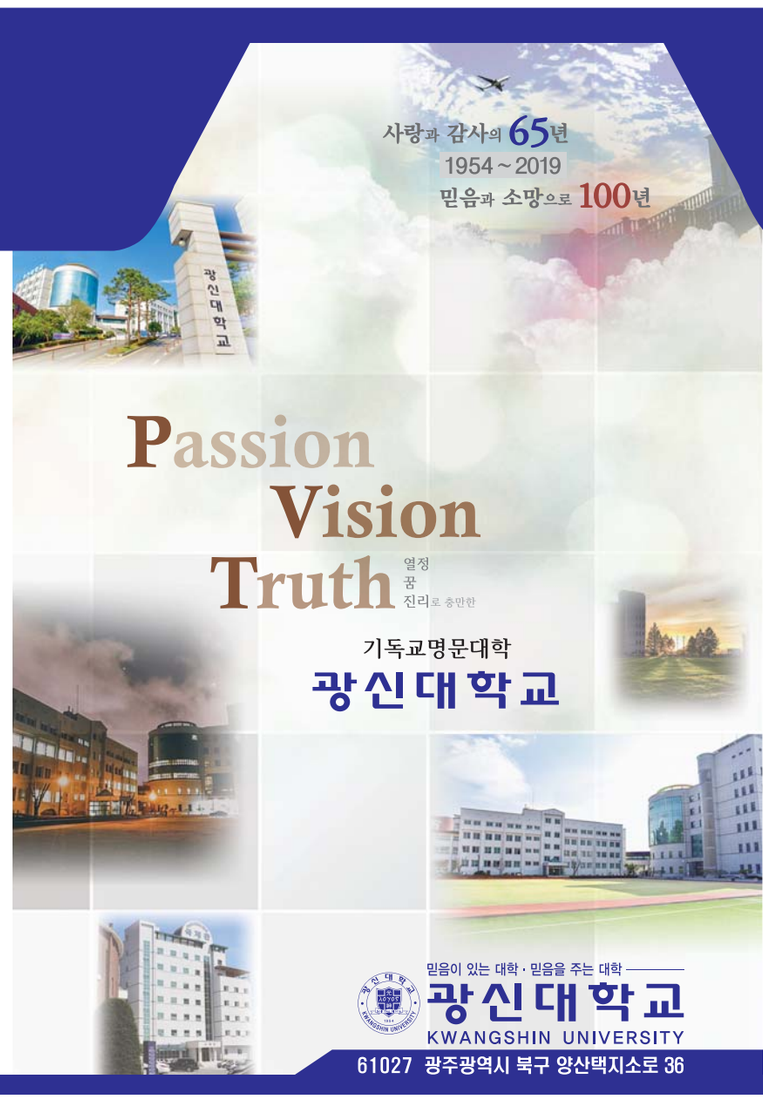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정시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 용음악학 전공)	5
총계		28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9. 12. 26(목) ~ 31(화)
· 전 형 일 :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7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치료학과(D.C.S.)	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 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